

## 2018 외무영사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

문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가의 동의표시권한에 대한 특정한 제한
- ㄴ. 사정의 근본적 변경
- ㄷ. 타방 교섭국의 기만
- ㄹ. 타당 당사국의 조약의 중대한 위반
- ㅁ. 후발적 이행불능
- ㅂ. 국가대표의 부정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ㅂ
- ③ ㄴ, ㄹ, ㅁ
- ④ ㄷ, ㅁ, ㅂ

정답 ②

- ㄱ. ○. 조약법 제47조 상대적 무효사유
- ㄴ. ×. 조약법 제62조 상대적 종료사유
- ㄷ. ○. 조약법 제49조 상대적 무효사유
- ㄹ. ×. 조약법 제60조 상대적 종료사유
- ㅁ. ×. 조약법 제61조 상대적 종료사유
- ㅂ. ○. 조약법 제50조 상대적 무효사유

문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자기집행적 조약규정에 대해서는 수용이론을 적용한다.
- ② 영국은 이원론에 의거하여 의회의 이행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을 적용한다.
- ③ 우리나라는 일원론에 의거하여 모든 조약을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한다.
- ④ 독일은 연방 의회의 동의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정답 ③

- ①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8년 *Medellin* 사건에서 자기집행적 조약규정과 비자기집행적 조약규정을 정의하여 그 개념과 수용 여부를 분명히 하였다. 즉 조약규정의 자기집행성이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데 비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방법으로서 국내적 효력을 갖는 것(직접적용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에 더하여 사적 권리 또는 사적 소권 내지 민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직접효력성)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반해 비자기집행적 조약 규정은 그 자체



건에서 속지주의를 확대한 효과이론(the Effect Doctrine)의 채용하였다. 즉 미국의 법무부와 재판소들은 미국의 독점금지관련 법률들은 외국인과 외국회사들이 자국영토 내에서 자국법에 의거하여 완전히 합법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미국의 경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 ㄴ. ○.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98조 제2항 전단은 미국의 효과이론을 계수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ㄷ. ○. 이행이론이란 유럽공동체 사법법원이 *Wood Pulp Cartel* 사건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역외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행위에 EU 경쟁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EU 역내에서 “이행”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해외에서 가격담합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합의가 실제 이행된 영토국이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의 태도와는 달리 EU설립조약 제81조와 제82조의 경쟁정책과 관련 효과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 ㄹ.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4월 4일 일본, 미국, 독일의 6개 흑연적극봉 생산업체들이 외국에서 행한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1호를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초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그 법적 근거에 대해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들과의 합의가 비록 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실행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를 통해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법원이 취하고 있는 “효과이론”과 유럽공동체 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취하고 있는 “이행이론”을 모두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다룬 대법원은 2006년 3월 24일 역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국회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공정거래법을 개정, 제2조의 2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효과이론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문 4.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의 제정 없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주권면제론을 수용하고 있다.
- ② 제한적 주권면제론에서는 주권면제 대상이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한정되고 상업

적 행위는 배제된다.

- ③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주어지는 국가원수의 면제와 특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2012년 페리니(Ferrini) 사건에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국가행위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답 ④

- ① ○. 우리나라는 국가면제법 또는 주권면제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 ② ○. 제한적 면제이론은 국가는 한 개의 통치권력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법인이라는 2중인격자로서, 외국의 행위를 주권적·권력적·공법적 행위와 비주권적·비권력적·상업적·사법적 행위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된다.
- ③ ○. 협약 제3조 2항
- ④ ×. 2012년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ICJ는 국가면제 규칙은 그 성격이 절차적인 것으로서 어떤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문제의 행위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강행규범은 다른 규범과 국가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행규범과 국가면제규칙은 그 대상과 목적이 각기 다른 별개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으며, 따라서 불법행위가 강행규범 위반행위라고 하여 territorial tort principle 규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문 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공관의 모든 공관원은 협약상 외교관에 해당한다.
- ② 외교공관의 공관장 계급은 파견국과 접수국의 합의에 따른다.
- ③ 공관장은 서열과 의례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 계급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④ 공관장의 해당 계급 내 서열은 직무를 개시한 일자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정답 ①

- ① ×. 공관원은 공관장과 공관직원을 말하며(제1조 b), "공관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을 말한다(제1조 c). 이중 "외교직원"은 외교관의 직급을 가진 공관직원을 말한다(제1조 d). "외교관"이라 함은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을 말한다(제1조 e).

- ② ○. 공관장에게 부여되는 계급은 국가 간의 합의로 정한다(제15조).
- ③ ○. 공관장은 다음의 3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a)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대사 또는 교황청대사, 그리고 동등한 계급을 가진 기타의 공관장, (b)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공사 또는 교황청 공사, (c) 외무부장관에게 파견된 대리공사. 다만 서열 및 의례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계급으로 인한 공관장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제14조).
- ④ ○. 공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개시한 일자와 시간의 순서로 각자의 해당계급내의 서열이 정하여진다(제16조 1항).

**문 6.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 ② 외교관계 단절은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영사기능은 외교공관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 ④ 영사기관의 소재지와 등급은 파견국이 결정하여 접수국에 통보한 후 확정된다.

정답 ④

- ① ○. 국가 간의 영사관계수립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제2조 1항). 외교관계의 수립에 합의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도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2항).
- ② ○. 외교관계의 단절은 영사관계의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제2조 3항).
- ③ ○. 영사기능은 영사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영사기능은 또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외교공관에 의하여 수행된다(제3조).
- ④ ×. 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및 영사관할구역은 파견국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접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 2항).

**문 7.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의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국가의 행위가 2001년 초안 규정상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가중된다.
- ③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책임국과 관계에서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로

부터 면제된다.

- ④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에는 의무 위반 중지 및 재발방지, 계속적 의무 이행, 만족이 포함된다.

정답 ④

- ① ×. ILC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비권력적·상업적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책임법의 귀속성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에 기초한 국제판례로 미국-루마니아 간의 BIT에 기초하여 제기된 2005년 *Noble Ventures, Inc v. Romania* 사건이 있다. 미국 회사 Noble Ventures는 루마니아가 기업의 민영화 합의를 위반하였고 이것은 당해 BIT의 우산조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ICSID 중재재판에 회부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의 민영화계약은 Noble Ventures와 루마니아 국유기금 사이에 체결된 것이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권력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여 상업적 행위는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소는 이 같은 구분은 국가면제법 분야에서는 중요하나 국가책임법 분야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국가귀속성을 인정하였다.
- ② ×. 1980년 잠정초안에서 ILC는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범죄와 불법행위로 구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즉, 우선 국가의 국제범죄를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여 그 위반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범죄라고 인정되는 국제의무의 위반에 기인하는 국제위법행위’ 라고 규정한 후, 범죄 이외의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 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국가들의 반발이 있어 2000년 ILC의 초안작성위원회는 잠정초안에 규정되어 있던 범죄와 불법행위의 구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위법행위의 결과를 다루는 장에서 ‘국제공동체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무의 중대한 위반’ 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위법행위를 규정하였고, 2001년 ILC 이를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속하는 의무의 중대한 위반’ 이라고 용어를 변경하였다.
- ③ ×. 피해국과 위반국간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0조 2항 a호).
- ④ ○. 의무위반국은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을 중지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확약과 보장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제30조). 국제법위법행위에 책임 있는 국가는 그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가 원상회복 또는 보상에 의하여 배상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사죄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37조 1항).

문 8.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 및

이에 의해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ICSI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에 ICSID 내에서 알선, 조정, 중재 및 재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분쟁당사자들은 ICSID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서면으로 부여한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③ 중재재판 준거법의 미합의시에 중재재판부는 분쟁당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④ 분쟁당사국들은 ICSID 협약에 따라 내려진 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①

- ① ×. 조정절차와 중재절차가 있다.
- ② ○.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을 본부에 부탁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계약서에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체약국가들이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과의 분쟁은 ICSID에서 해결한다고 내용을 정하는 것도 된다. 이 경우 동 조약의 구속력에 근거하여 이미 타방 체약국이 본부관할을 동의했으므로, 이제 개인은 일방적으로 본부관할권을 수락만 하면 된다. 일단 동의하면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 ③ ○. 우선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법규칙을 적용하는데, 그와 같은 선택이 없으면 ‘분쟁체약당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규’를 모두 적용한다. 따라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수용을 허용하는 국내법은 중재인들에 의하여 무시된다. 합의하는 경우 형평과 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 ④ ○. 중재재판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선언된 당사자는 판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은 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것이 당해 국가의 재판소의 최종판결인 것과 같이 자국영토 내에서 집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문 9.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거하여 난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체약국은 난민의 귀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체약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 ④ 체약국은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 ① ○.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없이 이 협약의 규정

을 적용한다(제3조).

- ② ×.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화 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제34조).
- ③ ○.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제32조 1항).
- ④ ○. 영토국은 합법 또는 불법체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제33조 1항).

**문 10.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승계란 영토의 국제관계 관련 책임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② 국가의 일부 분리에 있어서 선행국 영토 전체에 유효한 조약은 각 승계국의 승계통고에 의해 효력을 가진다.
- ③ 새로 독립한 국가는 승계통고에 의해 기존 다자조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 ④ 조약에 의해 수립된 국경은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②

- ① ○. 국가승계란 영토주권의 변경이 어떠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다루는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한 국가의 영토(일부 또는 전부)가 타국으로 이전될 때, 당해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가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들(예컨대, 조약·국유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국민의 국적·개인의 권리·국제기구의 회원국의 지위·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등)이 어느 범위 내에서 당해 영토를 새로 획득하는 국가에게 이전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 ② ×. 분리독립과 분열 구분 없이 승계 시에 전임국가의 영토 전체에서 발효 중이던 조약은 신국가들에게 효력을 지속한다. 신국가로 된 영토 부분에 대해서만 발효 중이던 전임국가의 조약은 오로지 당해 신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을 지속한다. 다만, 관련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또는 신국가에 대한 조약의 적용이 조약의 객체·목적과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운용을 위한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킨다는 것이 그 조약으로부터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4조). 즉 조약을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어 통고에 의해 효력을 가진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영토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 국



가가 탄생하는 경우, 신생독립국과 마찬가지로 백지출발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국제관행이다.

- ③ ○.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신생독립국은 식민모국의 조약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다. 즉, ‘백지출발주의’(clean slate rule)가 적용된다. 신생독립국은 조약승계의 취지를 문제된 조약의 기탁소에 ‘통고’ 함으로써 전임국가가 체결해 놓은 식민지 관련 다자조약을 승계할 수 있다.
- ④ ○. 협약 제11조는 조약에 의하여 수립된 국경선 그리고 국경선체제와 관련하여 조약에 의하여 수립된 권리·의무는 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국경선은 당사국간에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는 국경선신성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관행을 확인하는 것이다. 1986년 부르키나파소 대 말리 Frontier Dispute 사건에서 ICJ는 “이른바 ‘국경선신성의 원칙’ 이 현상유지 원칙(uti possidetis)으로 표현되든지 그렇지 않든간에 국가승계시 국가간 기존경계선을 존중할 의무가 일반국제법으로부터 도출된다” 고 판시하였다.

문 1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 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대상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목적의 활동
- ㄴ.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활동
- ㄷ. 해양과학조사
- ㄹ.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 ㅁ. 해풍을 이용한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활동

- ①  $\neg, \perp, \sqsubset$

③  $\perp, \sqsubset, \subseteq$

②  $\neg, \subseteq, \square$

④  $\sqsubset, \subseteq, \square$

정답 ③

그와 같은 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제56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합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 (b)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
    - (i)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 (ii) 해양과학조사
    - (i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 (c)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2. 이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연안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3. 해저와 하층토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권리는 제6부에 따라 행사된다.

문 1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선박의 기국은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ㄴ. 모든 국가의 군함은 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임검권을 갖는다.  
 ㄷ.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은 그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ㄹ. 해적방송이 수신되지만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지 않는 국가는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ㅁ. 시설의 등록국은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정답 ③

입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선박의 기국(ㄱ. ○), 시설의 등록국(ㄴ. ○), 무허가방송종사자의 국적국(ㄷ. ○), 송신이 수신될 수 있는 국가(ㄹ. ×), 그리고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국가만이(ㄺ. ×) 체포, 압류,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문 13.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타국의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발생한다.
- ② 지구 표면 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절대책임이 발생한다.
- ③ 국제책임은 우주물체의 발사를 의뢰한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발사를 실시한 국가는 면책된다.
- ④ 비정부주체가 우주물체를 소유하고 발사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속국이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

정답 ④

- ① ×. 1972년 책임협약 제2조에 의하면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의 사람이나 재산에 또는 비행 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발사국이 절대책임을 진다.
- ② ×. 지구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책임협약 제3조).
- ③ ×. 72년 책임협약은 발사국의 개념을 우주물체의 발사를 실시 또는 조직하는 국

가와 우주물체가 발사되는 영토 또는 시설의 소속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 ④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부기구에 의하여 수행되건 아니면 비정부실체에 의하여 수행되건 관계없이, 소속국가가 국제책임을 진다. 이것은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책임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일반국제법의 원칙이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수정된 것인데, 비정부실체의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소속국의 허가와 계속적인 감독이 요구되고(우주조약 제6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문 14. 1972년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월경성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책임 원칙
- ②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 ③ 사전주의 원칙
- ④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정답 ①

- ① ○.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원칙에 따라 자국의 환경정책에 입각하여 자원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국관할권 또는 통제 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관할권 범위 밖이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1972년 스톡홀름 환경선언 원칙 21). 동 원칙은 자국관할권 범위 밖의 지역, 즉 공해, 우주공간, 천체 및 심해저 등에 대해서까지 환경침해방지책임을 부과한 점, 오염방지의 책임과 국토이용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대응시켜 무제한적 주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동 규정형식은 이후 해양법협약 제194조, 1992년 리우선언 원칙 2에 반영되었다.
- ② ×. 공동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이 합성된 형태로 규정된 것은 1992년 리우선언(제7원칙)을 통해서이다.
- ③ ×. 사전주의원칙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 원칙2에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류의 행복과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즉, 인간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일은 세계인의 절박한 소망이며 모든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고 규정되어 반영되어 있지만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1992년 리우선언 제15원칙이다.
- ④ ×. 지속가능개발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세대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1987년 브룬트란드(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되었다.

문 1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은 국제연합 소재지에 대표를 항상 두어야 한다.
- ④ 회원국은 자국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토의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정답 ④

- ① ○.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헌장 제30조).
- ② ○. 안전보장이사회만이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25조). 그러나 헌장 제7장에 근거한 결정 이외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다.
- ③ ○.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제28조 1항).
- ④ ×. 헌장 제31조에 의해 이해관계국은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할 수 없으며, 제32조 분쟁당사국은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문 16.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소는 권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시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피소국이 관할권 부인만을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확대관할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③ 재판소는 선결적 항변 절차상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아니한 선결적 쟁점을 자발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
- ④ 권고적 의견 제도는 제쟁관할권 미수락 국가의 사건을 재판소에 맡기기 위한 우회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답 ③

- ① ○. 권고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재판소가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쟁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소규정의 규정들에 또한 따른다(제68조). 따라서 권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시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 2006년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 ICJ는 확대관할권을 발생시키는 피고국가의 태도는 '자발적이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욕구를 모호하지 않게 표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피고국가가 단지 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확대관할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ICJ규정에 확대관할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ICJ는 이 확대관할권의 관행을 1978년에 채택한 재판소규칙 제38조 5항에서 명문화하였다.

- ③ ×. ICJ규칙 제79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ICJ가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 사항을 청구함으로써 ICJ의 본안심리를 배제할 수 있는데, 이를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이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선결적 항변의 개념을 확장시켜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관할권이나 수리 가능성 문제를 다루는 경우와 본안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선결적 항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 ④ ○. 권고적 의견부여가 당사국의 합의를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는 재판사건에 대한 일종의 우회적 제소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정인섭). 권고적 의견의 요청이 현재 국가들 간에 분쟁중인 법률문제에 관계된 것인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규칙 제102조 2항), 당초 PCIJ는 국가간 분쟁의 핵심적 쟁점과 관련된 권고적 의견의 부여는 주저했었다. 그러나 국가의 권리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ICJ는 의견 부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점차 적극적으로 의견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즉 권고적 의견 제도는 분쟁관할권 미수락 국가의 사건을 재판소에 맡기기 위한 우회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 문 17.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②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이 기존의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개념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고 보았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Oil Platforms 사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침국에 있다고 확인하였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Oil Platforms 사건에서 사망자가 없는 함정피격에 대응하여 순양함을 포함한 여러 척의 해군 함정과 비행기를 공격한 행위가 자위권 행사의 비례성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②

- ① ○. 집단적 자위권(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이란 UN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무력공격이 가해질 경우 자국의 독립과 안전이 당해 타 회원국의 그것과 동일시될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무력공격에 대하여 반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sup>1)</sup> 집단적 자위의 개념은 UN헌장의 모체인 덤바턴오크스제안에는 없었

1) 이한기 272면

으나, 샌프란시스코회의의 현장심의과정에서 인정되었다. 미주제국은 채플테펙협정(Act of Chapultepec)에서 집단안전보장제도의 도입에 합의하였으나, 강제조치의 발동에 안보리의 동의를 요하는 현장규정이 채택되는 경우 집단안전보장제도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현장을 저해하지 않고도 지역적 협정에 의거한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게 되었다.

- ② ×. ICJ는 1986년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이 국제관습법상 자위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병존하며 그 내용이 상이하며, 유엔헌장 제51조는 골격조항이기 때문에 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관습법상의 규칙이 보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③ ○. 2003년 *Oil Platforms case*에서 ICJ는 “자위로 행하는 무력사용이 정당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력사용을 하는 국가가 자신이 무력공격의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고 했다. 개별적 자위권을 주장하는 미국으로서는 자국이 이들 공격의 고의적인 피해국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공격이 특별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은 입증에 실패하였다고 판시하였다.
- ④ ○. 2003년 *Oil Platforms case*에서 ICJ는 미국의 이란 석유 플랫폼에 대한 공격은 비례에 맞지 않으며, 사망자가 없는 함정피격에 대응하여 순양함을 포함한 여러 척의 해군 함정과 비행기를 공격한 행위가 자위권 행사의 비례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문 18.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할 범죄 중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체계적인 공격은 반드시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일 필요는 없다.
- ② 인도에 반하는 죄는 무력분쟁 상황 등 전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공격은 폭력적 형태로 자행된 행위만을 포함한다.
- ④ 인도에 반하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격에 대한 인식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 ① ○. 체계적 공격이란 공통의 정책기반 위에서 조직화되고 규칙적인 패턴을 따르는 공격을 의미하며, 그 정책이 반드시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일 필요는 없으나 계획적이었는가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 ② ×. 민간인이라는 용어는 인도에 반하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무력충돌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평시·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그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

- ③ ×. 반드시 폭력적 형태로만 자행되지는 않으며, 인종차별(Apartheid) 체제의 적용이나 주민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조직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이 외견상 비폭력적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 ④ ×. 인도에 반하는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행자가 진행되는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개별 행위자가 국가나 조직이 취하는 공격의 모든 성격과 계획을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며, 상황의 전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일반범죄나 전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문 19.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동맹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국을 협정 체결 이전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유무역지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역내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 ③ 제3국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회원국은 단일한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관세동맹 회원국은 상이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 ④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정답 ③

- ① ○. GATT 제24조 5항 (b)에 의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때에는 제3국과의 무역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상거래 규정은 당해 자유무역지대 형성 전에 각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되던 관세 및 기타 상거래규정보다 높거나 더욱 제한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 ② ○. FTA나 관세동맹인 CU에 참여하려는 WTO회원국들은 GATT 제24조 8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을 철폐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모든 무역장벽을 즉시 철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 자유무역지대는 역내국가간 관세 및 무역제한조치의 감축이나 완화, 철폐를 기본내용으로 한다. 즉, 역내국가 상호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의 흐름을 저지하는 관세, 쿼터 등의 무역제한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으로, 역내국가 간에는 관세장벽이 제거되지만 각 회원국은 여전히 제3국에 대하여 자신의 관세 높이를 설정할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대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구성영역들이 대외적으로 하나의 단위가 되어 제3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세 및 기타 무역제한을 적용한다. 즉,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가 도입되기 때문에 제3국으로부터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이 어느 회원국을 통해 들어오건 상관없이 관세가 동일한 세율로 부과된다.

- ④ ○. GATT 제24조에 의하면, WTO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무역지대(FTA)나 관세동맹(CU)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동 지역에 속한 회원국끼리만 특혜를 주고 받는 것이 일정 조건하에 허용된다.

**문 20. 세계구명기구 분쟁해결기구(WTO DSB)가 다른 환경 관련 분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2006년 유럽공동체(EC) 유전자변형식품(GMO) 사건
- ② 2007년 브라질 타이어 사건
- ③ 2013년 유럽연합(EU) 물개 사건
- ④ 2014년 일본 포경 사건

정답 ④

나머지는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사건이나, ④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④ ×. 1986년 국제포경규제규약에 따라 상업 목적의 포경은 완전히 금지되었으나, 일본은 연구를 목적으로 한 고래잡이 허용조항을 익용해 고래의 생식 현황을 연구한다는 핑계로 고래를 상업적으로 남획해 왔다. 이에 호주가 일본은 조사포경이라고 주장하지만 포획 수가 너무 많아 실제로는 상업포경이라고 주장하며 2010년 5월에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으며, 2014년 3월 31일 일본의 남극해에서의 포경을 중단시킨 판례이다. 즉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이 아니다.